

전남 '드론'·광주 '수소車' 시티로

정부 '규제 프리존' 통해 14개 시·도 전략산업 육성
 구체적 지원책은 없어... 수도권 규제 완화 우려도

전남의 드론(무인기)과 에너지신산업(전력 SI, 화학소재 포함) 그리고 광주의 친환경자동차(수소융합스테이션)와 에너지신산업(전력변환 및 저장)이 전략산업으로 선정됐다. 이들 산업의 집적지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주는 '규제 프리존(Free zone)'도 들어선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과거 정부 정책과 중복되거나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책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알맹이도 없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주제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받아 지난 14일 지역발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역별로 사물인터넷(IoT), 드론(무인기),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스마트기기, 농생명 등 전략산업을 2개씩 선정했다. 규제프리존에서는 재정, 세제, 금융, 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제공하고 지역실비투자펀드 같은 중소기업 정책금융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관외로 조성해 지역 내 500여 개 부품업체 및 연관기업, 전자부품연구원 등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국내 수소·전기차 상용화를 선도한다. 수소충전소와 기존 충전·주유소의 병행설치, 이동식·패키지형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고 규제 프리존 내에서는 수소융합스테이션 실증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한편·에너지 연구기관과 기존 연관산업 인프라, 에너지밸리 등과 연계해 전력에너지 산업의 허브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태양광 이외의 신재생에너지도 도시공원 내 분산전원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제한구역 해제 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줄기로 했다.

비행 허가절차 간소화, 국가종합비행성능 시험장 예정지(간척지) 용도 변경, 환경영향평가 로소화 등이 추진된다. 한전과 빛가람에너지밸리를 통해 스마트그리드 수출전진기지로 삼기 위해 친환경산업 입주 시 산업단지 내 녹지 확보 비율을 4%포인트 범위 내에서 완화해준다.

정부는 이들 지역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재정·금융·세제·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제시된 검토과제 가운데 '집적지역 중 낙후지역은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의 경우, 수도권 규제의 근간인 '공장 총량제'를 일부라도 우회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남은 무인기 산업 생태계 구축 차원에서 시범사업 지역 내 아간·고고도·장거리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전면 수정 불가피

광주시 용역, 696억 적자 예상... 숙박시설 축소·상가 확대 제시

10년여 년 간 장기 표류하고 있는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기존 계획과 달리 전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8개월간의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기존의 사업계획은 696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현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민간개발을 토대로 기존 시설 계획 가운데 숙박시설 축소, 상가시설 확대 등의 대안이 제시됐다.

전남대 산학협력단은 (주)어등산리조트로부터 기부받은 유원지 부지(41만 5650㎡)를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지난 4월부터 시행했으며, 최종 보고서는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숙박시설의 경우 기존 14만5000여㎡에서 1만6000여㎡로 10분의 1로 줄이고, 대신 상가시설은 2만 4000여㎡에서 4배 이상 늘린 13만여㎡로 조정했다.

이어 숙박시설은 최소 규모의 객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상가시설은 최대 규모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의견도 냈다. 테마파크와 운동시설은 10만9000여㎡에서 14만4000여㎡로 다소 늘었다. 특히 자금조달과 개발운영 등에서 우위를 가진 민간개발 방식을 제안했다.

용역 안대로라면 특급호텔 등 대규모 숙박시설 대신 비즈니스급 호텔 정도만 들어서고, 대신 아웃렛 등 대규모 복합 쇼핑 공간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미 특정 대기업 이름이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특혜시비가 일 우려도 적지 않다.

광주시 관계자는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는 개발여건과 시장조사 수요분석, 기존 유원지 조성계획의 타당성 분석 등이 이뤄졌다"며 "관광단지 조성 및 활성화 방안도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1월 중에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추진지에 대한 용역을 지난 4월부터 시행했으며, 최종 보고서는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

그러나 사업 시행방식이 민자유치를 전제로 한 만큼 사업성을 위한 상가시설 확대가 불가피하다. 애초 광주시가 밝힌 기본원칙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는 어등산 조성사업의 전제로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 시 재정부담 최소화를 들고 있다.

또 현재 골프장을 조성, 운영중인 기존 사업자와의 소송 분쟁 등도 해결해야 과제다. 기존 사업자는 민간개발 방식으로 할 경우 원(原)사업자의 권리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 최원길기자 cki@kwangju.co.kr



"우리는 산타 원정대" 16일 광주시 서구 신세계백화점 1층 광장에서 열린 '광주신세계 희망산타 원정대 발대식'에 참여한 희망산타들이 풍선을 흔들며 환하게 웃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내 '아트버스' 달린다 ▶7면



2015 스포츠 10대 뉴스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정시모집 | 062)605-1114

선거구 미확정에 빨간 출마예정자 대법원에 '총선 연기' 가처분 신청

선거구 확정 지연에 반발한 20대 총선 출마 예정자들이 권리 침해 주장하며 대법원에 '선거 실시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영집 지역미래연구원장, 서동영 변호사, 서삼석 전 무안군수는 16일 오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회의 직무유기로 선거구 미확정이라는 법률위반 사태가 벌어졌다"면서 "대법원에 선거실시 금지 가처분을 신청

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것은 20대 총선을 무효로 만들 중대한 하자가 될 수도 있으니 선거구 확정 후 120일 전에는 선거를 해서 안된다는 결정을 받으려는 것이라고 서 변호사 등은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지난 6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선거 1년 전까지 확정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부칙에 내년 4·13 총선의 선거구는 선거일 5

개월 전까지 확정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면서 "선거구 확정 시한이 법률에 명백히 정해져있기 때문에 선거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선거구 확정 지연되고 있으니 내년 4월 13일 선거를 해서 안되고 선거구 확정 120일 후로 연기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 변호사는 광양에서, 서 전 군수는 무안·신안에서, 김 원장은 광주 남구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이다.

신청인들은 "혼란에 빠져 막중한 피해를 보는 출마 예정자들을 대신해 법률 위반 사태에 항의하고 국회에 경종을 울리려고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최원길기자 cki@kwangju.co.kr

직권상정 땀 광주·전남 2석 감소 가능성

정의장 "연말 심사기일 지정"

정의화 국회의장은 20대 총선 선거구 확정 여야 협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입법 비상사태를 해소할 특단의 조치로 직권상정 가능성을 재차 언급했다.

정의화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적용됐던 기존 안(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이 적용될 수밖에 없어 광주와 전남의 의석이 각기 1석 정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의화 의원은 16일 국회 의정실에서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12월 말까지 가서 '입법 비상사태'가 확실하게 도래되면 여야 함께 동의할 수 있는 법안을 제가 직권 상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단의 조치(결단)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와 관련해서는 연말연시에 심사기일을 지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연말연시는 12월 31일 자정을 기준으로 토요일을 말한다. 정의 의원은 "야당이 제시한 방안 중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선거권자 연령을 18세로 인하는 것이 있는데 18세 부분은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심사숙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장은 청와대의 노동개혁 법안 및 경제 관련 쟁점법안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 "의정은 어디까지나 법에 따라 할 수밖에 없다"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생명의 땅 전남
 Full of Life, Jeollanam

아이 낳기 좋은 전남

아기 탄생의 울음소리
 대한민국 희망의
 고동 소리입니다.

전라남도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해 도와 시군이 한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JeollaNamdo